

Vol. 12

2021.12.14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545-5115

F. 02-3444-5115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 1 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 2 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 3 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 3 본부 권경아전임 kakwon@hjcustoms.co.kr

CONTENTS

I. 법령 개정사항

II. 입안 예고

III. 조세심판원 사례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관세청 소속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를 내부협의체로 전환 및 기업심사 연기 승인 시 처리절차 구체화 등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법인심사 운영심의 위원회 내부협의체로 전환에 따른 정비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내부위원(5인)과 외부위원(6인, pool에서 매회 지정)에서 내부위원(7인)으로 변경 - 위원 구성 변경으로 위원회 개의 정족수를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서 위원 7인 중 5인 이상 참석으로 변경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외부자문 단계 신설
기업심사 연기 승인 시 처리절차 구체화	기업심사 연기 시 연기에 따라 변경된 심사 대상기간을 통지서(별지8호 서식)에 명기하고, 연기신청에 대한 결과 회신기한(착수전 15일)을 구체화
기타 개정사항	2021년도 관세청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직제의 부서(장) 명칭 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개정

(3) 시행일

'21.11.1.

I. 법령 개정사항

2.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요소수의 국내가격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공업용 요소에 대해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세율표 번호	품명	세율	한계수량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 비료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102.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 없다)		
3102.10-1000	비료나 비료 제조용		
3102.10-9000	기타		

(3) 시행일

'21.11.12.

I. 법령 개정사항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한 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2조2(탄력세율) 제1항 제3호 개정	별표 1 제6호바목(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u>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20원으로 한다.</u>

(3) 시행일

'21.11.12.

I. 법령 개정사항

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4월 30일까지 한 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제3조2(탄력세율) 제1호 개정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29원. <u>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23원으로 한다.</u>
제3조2(탄력세율) 제2호 개정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375원. <u>다만, 2022년 4월 30일까지는 리터당 300원으로 한다.</u>

(3) 시행일

'21.11.12.

I. 법령 개정사항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현황 확인과 화학물질의 수입허가 또는 수입신고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 정보 제공 요청 신설	<p>환경부장관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u>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현황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u></p> <p>요청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p>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신설	<p>환경부장관은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을 신고한 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u>수입자에 관한 자료</u>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u>화학물질의 품명·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u>로서 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3) 시행일

’21.11.19.

II. 입안 예고

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의 법 제95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물품(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의 관세감면 확대기한을 1년 연장하고,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 중 유황과립장치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2호. 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을	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30(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외대상]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1	8419.89	유황과립장치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용융황을 원형의 고체 과립으로 변환하는 공정으로 그 크기는 직경 6mm이내이며 시간당 24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2	8422.20	세척기	컴퓨터제어방식으로 운용되는 바이알 자동 세척 장치로서 시간당 24,000 바이알 이상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
3	8422.20	멸균기	컴퓨터제어방식으로 운용되는 바이알 자동 멸균장치로서 시간당 24,000 바이알 이상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한정.

II. 입안 예고

연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4	8422.30	카트리지 라벨러	용기(병)에 라벨을 부착하는 장비로서 처리속도가 시간당 24,000 카트리지 이상인 것으로 한정.
5	8457.10	수평 머시닝 센터	수치제어 ·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인 것으로서 대상물의 크기가 400 x 400 x 400mm까지 가공 가능하며 주축의 회전수가 최대 분당 18,000 회인 것으로 각 축의 진직도 및 진원도가 5마이크로미터(μ m) 이내인 것으로 한정.
6	9031.80	기어체커	측정기어에 맞물려 타격(Nick), OBD(Over Ball Diameter) 및 톱니의 흔들림 정도의 측정을 통하여 기어의 이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정밀도가 5마이크로미터(μ m) 이내인 것으로 한정.
7	9031.80	카트리지 이물검사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카트리지의 캡 성형, 액중이물 등의 불량품을 분리 · 배출하는 자동시스템 장비로 시간 당 24,000 카트리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8	9031.80	엔진다이나모 테스트기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서 새는 블로바이 가스(Blow-by Gas) 또는 엔진 오일(Oil)의 소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9	9031.80	틈새 선별기	자동차 피스톤 링(Piston Ring)의 절단된 부위의 간격(Gap)을 선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II. 입안 예고

2.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합성평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 면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분	내용
무선국 정기검사 연기 규정 신설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무선국 검사가 어려운 경우 정기검사 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무선국 변경 시 전자파 강도 측정범위 명확화	무선국 준공이후 안테나공급전력, 이득, 구성 등의 변경 발생으로 전자파 강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전자파 강도 측정에서 제외토록 명시
검사수수료 재검토 규정 신설	원가에 기반한 검사수수료를 5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재검토 규정을 신설
전자파강도 보고대상 무선국 범위 합리화	무선국 설치장소에 일반인 접근이 제한되거나 출력 분산으로 개별 안테나 전자파 강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전자파 강도 측정·관리 대상에서 제외
적합성평가 면제 범위 확대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기자재는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판매하더라도 적합성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부여 효과가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등에 따라 특례가 부여된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추가
전파사용료 산정기준 개편	공용·환경친화 정비 이행실적이 전파사용료 감면제도와 연계·부과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기준 개정
이동통신 검사수수료 개편	이동통신 서비스 전환 추세 및 무선국 설치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원가를 기반으로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수수료 개편

Ⅲ. 조세심판원 사례

1. 과세처분이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조사에 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블루투스 스피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제8518.21-0000호(단일형 스피커)로 신고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함.

나.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가능성을 이유로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하자,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을 인정하며 자금사정이 되는대로 분할 신고·납부 후 통보할 것’이라고 회신한 후, ‘쟁점물품은 세관장이 범칙조사하여 과세처분한 건의 누락물품으로서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판결 이후로 수정신고를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함.

다.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2015.12.29.부터 2017.3.21.까지 제8518.21-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블루투스 스피커는 제8518.22-0000호(복합형 스피커 한-중 FTA 협정관세율 5.6~7.2%)에 분류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청구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심판결을 확정함.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확정판결 이후에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에게 원산지 서면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한다) 통지를 하는 한편 쟁점물품 중 관세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2건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나머지 건에 대하여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함.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2) 결정요지 :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경정 및 심판청구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세법」 제111조에 따른 조사 없이 단지 세관장의 과세처분에서 누락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과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이 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금액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3) 결정일

2021.11.05. (조심 2021 관 0057)

Ⅲ. 조세심판원 사례

2. 관세부와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과세 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한 쟁점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000로부터 LED를 구매하여 수입통관하였고, 처분청은 수입물품 통관적법성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함.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①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에서 판매관리비 및 목표 영업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결정하면서 지급요청이나 지급사실이 없는 Global Business Unit Product Marketing 비용(글로벌 마케팅 비용) 및 Global Service Agreement 비용(글로벌 서비스계약 비용)을 판매관리비로 공제함으로써 실제지급가격의 누락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의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② 수입물품 중 LED모듈의 품목번호는 HSK 제8541.40-2090호(발광다이오드, WTO협정세율 0%)가 아니라 HSK 제8512.20-1010호(자동차용 조명용 기구, 기본세율 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의 과세전통지를 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임에도 관세부와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를 경정·고지하였고,

이후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① 과세가격은 재조사, ② 품목분류는 불채택, ③ 가산세 중 과세가격 관련 부분은 심리 생략, 품목분류 관련 부분은 불채택,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각하로 각 결정함.

한편, 청구법인은 해당 경정처분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각 거부함.

라. 청구법인은 위 경정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함.

Ⅲ. 조세심판원 사례

(2) 결정요지 :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에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없는 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는 바,

관세법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등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지만 과세전통지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 점, 관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과 달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할 수 있다는 예외적 사유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국세기본법상 내국세의 경우에도 통지를 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또는 과세예고통지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일 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한 쟁점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결정일

2021.11.16. (조심 2020 관 0120)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1.11.8(월)부터 시행.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구분	내용
적용대상 물품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적용대상자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
매점매석 판단기준	(‘20.1.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0년 중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1.1.1일 이후 신규 사업자)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
조사단속	신고센터(환경부, 산업부, 지역환경청) 및 합동단속반(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설치·운영
적용시한	‘21.11.8일 0시부터 ‘21.12.31일까지 시행
적용예외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관세청,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통계 대국민 공개

관세청은 11월부터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를 매월 공개.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와 달리, 우리기업이 수출 시 관세청에 신고한 운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 통계를 제공.

	상해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한국 컨테이너 운임통계
정보제공	물류서비스 공급자 (선사·포워더)	물류서비스 이용자 (수출기업)
정보수집	설문조사	실제 신고 운임
운임형태	비정기 건별 계약(SPOT) 운임	비정기 건별 계약(SPOT) + 장·단기 계약 운임
출발지	중국(상해) 출발 기준	우리나라 출발 기준
도착지	- 도착지가 중국인 경우 산출 불가 - 근거리 운임은 한국과 항로 차이가 커 참고 어려움	도착지가 중국인 경우 및 근거리 운임을 보다 정확히 반영

또한 주요 항로별로 '19년 1월 이후 최근 3년간의 월별 운임통계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누리집에 추가 공개하여 시계열 분석을 지원.

* <https://unipass.customs.go.kr/ets/> > 통계자료실 > 정기간행물

관세청은 향후 수입 컨테이너 운임과 항공 수출입 운임 통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표할 계획임.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과세 및 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9일부터 시행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있었음.

-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

□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임.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바, 환경부는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 확인명세서 미제출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4조), 유독물질 수입 신고 의무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61조)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요소(수)(HSK 제 3102.10-9000 호) 수입신고 시 안내사항

2021.11.11.부터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88호)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고시 제2021-232호)에 따라 제 3102.10-9000호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산업부 및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방법 및 내용

(1) 요소

-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공지사항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수입업자 신고안내' 신고 작성양식 참고
- 신고방법: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ask16707072@korea.kr)으로 신고
- 문의: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2) 요소수

- 환경부(me.go.kr) 공지·공고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 신고 매뉴얼 참고
- 신고방법: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시스템 회원 등록 후 신고

* URL 주소: emissiongrade.mecar.or.kr

- 문의: 한국환경공단 044-201-6931(차량용) 032-590-3608 (대기오염방지시설용)

□ 시행기간: 2021.11.11. ~ 2021.12.31.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5.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수출승인 절차 공고

□ 수출승인 절차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요소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됨.

이 경우 수출업체는 산업부에 '수출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첨부하여 '요소 수출승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부는 「요소 수출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출승인 가부 결정함. (접수 후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절차	내용
① 수출업체	신청서 및 계약서 등 근거서류 제출
② 산업부	위원회 상정
③ 요소 수출심의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장이 승인가부를 결정
④ 수출승인증 발급	산업부장관명의 승인증 발급
⑤ 수출	승인시 '수출승인증'을 관세청 제출 후 수출절차 진행

□ 요소 수출승인 판단기준

수출로 인하여 국내 산업용 요소 수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